

# 도정질의 전주-김제 통합 논란 다시 '수면 위'

김종철 “전북발전 위해 필요”  
정호영 “추진 주장 매우 유감”

한때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의 '전주-김제 통합론'이 전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전주7)은 8일 열린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전주-김제 통합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종철 의원은 “전주, 김제를 비롯한 전북도의 많은 지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며 “전주의 부흥과 전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그리고 전주의 지역적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광역도시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주-김제가 1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철 의원에 따르면 “발전을 이룬 도시들의 필수요인 중의 하나가 교통의 편리성인데 전주의 경우 교통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새만금과 가깝고 국제공항의 입지로도 적합한 김제와 통합한다면 두 지자체 모두에게 득이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전북도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서해안 쪽으로 도청 소재지를 옮긴 전남과 충남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김종철 의원은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조성된 혁신도시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혁신도시 거주민들의 불편해결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혁신도시 행정단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 8일 전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일괄 답변하고 있다.

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서묘포정의 활용방안과 그 대체부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었고,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새만금의 비산먼지를 제기하며 해결책을 주문과 미세먼지 측정소의 추가 설치도 요구했다.

이에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전주7)이 “전주의 광역화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그 중심축을 서해안으로 옮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 1차적으로 김

제-전주를 통합 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김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김제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도시 집중화·대형화 정책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으로 관망되었고,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김제-전주 통합을 통한 광역화 주장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제시민과 국민의당 내부에서

도 이미 통합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제를 다시 거론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며, 그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을 말할 때 그 절차적 민주주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의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마당에 김제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뜬금없이 양 지자체의 통합을 언급하는 것은 김제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이호근 의원 도정질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고창 제1선거구)은 8일 정례회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 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는 2017년 권고안 대비 77~79%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권고안 기준 6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지사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지속 건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김진성 기자

## 이상현, “서울시립대를 서남대 인수자로”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등 전북도 전략 마련 주문

남원시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서남대 정상화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8일(목) 열린 전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남원시민들은 서울시립대를 서남대 정상화의 최후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가 무엇인지 묻는 한편 서울시립대 인수자 선정에 대한 정치권과의 공조 및 대통령 건의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서울시립대가 적극적인 인수의향을 밝히며 나서고 있는 상황은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하던 서남대정상화에 쉼을 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의과대는 물론 농·생명 계열 등 대학전반의 육성의지를 갖고 있는 서울시립대가 반드시 인수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상현 의원은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과 관련, 문제인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향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의료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남원의료원의 부채비율 감감을 통한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노후시설 보

강 및 장비현대화 사업 추진, 심뇌혈관질환센터 신설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리산권 건설에 대한 전북도의 주도면밀한 대응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이상현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고 특히,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이번 기회를 살려서 반드시 서남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과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현 의원은 “도정질의는 도지사의 직접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기회인 만큼 밤을 새우며 질의내용을 준비했는데 긍정적 답변내용을 얻어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관련 남원지역 현안들이 순조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도, 생태관광 사업 6월중 확정

26일까지 조정보완지역 6개 시군 2회씩 토론회 통해

전북도는 6월 중 시군·센터·컨설팅팀과 함께 시군별 2회의 생태관광 사업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참여 대상 시군은 3월중 실시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 추진상황 컨설팅 결과 조정보완지역으로 구분된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순창 6개 시군이다.

도는 조정보완지역의 부단체장 주관으로 실시한 시군별 집중 토론회와 컨설팅팀 현장 확인 내용을 토대로 보완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시군별 2회의 집중 토론회 과정을 거쳐 생태관광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시군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부군수·국장 등 시군 관계자를 집중토론회에 참석하고 시군 컨설팅팀도 참여시켜 생태관광지 특성에 맞는 사업논의

를 실시한다.

시군 컨설팅팀은 시군별 생태관광지 특성에 맞게 지속적인 컨설팅 추진이 필요하여 생태자원분야 전문가, 작가·연출가, 컨설턴트 등 5인 이내로 5월중 구성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생태자원의 이해와 활용, 컨셉 설정, 세부사업 발굴, 기존사업 검토, 생태관광지 스토리, 주변연계지원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 후 시군별 사업이 확정된 후에도, 시군 컨설팅팀은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별 특성에 맞게 실시설계, 시공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컨설팅팀이 참여하여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 작업을 벌임으로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 도, ‘산림소득 사업’ 내달 7일까지 공모

산림작물 생산단지·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2개 사업

전북도는 7월 7일까지 2018년도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 내 단기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문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노지 재배 기반시설(관수, 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종자 모복식재 등)을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산림버섯류 재배시설, 관상산림식물류 등 시설재배 기반시설 조성 경우

총사업비 2억원에서 1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5ha 이상 산림사업을 하는 전문 임업인이 신청가능하며 총사업비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은, 5~10ha 경영인은 15%이상, 10ha 이상 경영인은 20%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잔여 사업비로 사업장내 단기임산물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1억원 이상~5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보조금은 3년간 분할 지원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고창군, 대통령공약이행 정책협의회 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고창군은 8일 고창군청에서 대선공약 이행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고창군 사업은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65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250억원) ▲노령권 치매, 파킨슨 센터 건립(400억원) 등이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과 연계해 ▲새만금연계 서남권 국도건설(부창대교)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박우정 군수는 “전력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농생명산업, 관광산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민주당 전북도당 등 정치권이 공조해 국가기획자문위원회 공약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했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지난7일 도당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며 “논의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날 주요현안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도시침수예방 종합사업 ▲국도23호선(흥덕-부안)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